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 11. 14.(화) 배포 즉시

정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·장시간 근로를 뿌리뽑고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11.14.(화) 경향신문, "'공짜 야근' 낳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 댔다"

> ㅇ 노동부는 당초 '69시간'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약속했다.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었는데 이후 구체적인 법·제도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.

2. 설명내용

□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지속해왔으며, 그 결과 포괄임금·고정OT를 활용하는 87개소 사업장 중에 임금체불 64개소(73.6%), 연장근로한도 위반 52개소(59.8%) 등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음

ㅇ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신설(2.2.~)하였고 앞으로도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해나갈 예정임

□ 아울러 11.13. 부터는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,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을 병행하겠음

□ 포괄임금의 법·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임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지영 (044-202-7994)
		담당자	사무관	박세은 (044-202-798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